

이춘재, 과거 세 차례 수사 대상 배제

“혈액형 · 족적 상이하다”...구체적 증거 없어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 큰 잘못” 사과

30여년 만에 정체가 확인된 허태의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과거 범행을 이어갈 당시 세 차례 경찰 수사에 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경찰은 그러나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용의선상에 오른 그를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이 사건 재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이춘재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춘재는 6차 사건 이후인 1986년 8월 발생한 초등생 강간사건과 1988년 9월 8차 사건, 1989년 7월 발생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3건의 사건과 관련

해 당시 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각 사건 때마다 이춘재를 조사했지만 이렇다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1986년 강간 사건에서는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988년 8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춘재의 음모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까지 했지만 ‘현장음모와 혈액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접었다.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255mm)과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과거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춘재의 족장(265mm)이 불일치하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배용주 청장은 “과거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

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경찰의 큰 잘못이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이슬 기자

‘故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2심 법정 구속

“피해자 유명연예인인 점 악용해 협박...죄질 안 좋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1부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

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 등을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

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무신고 숙박업소 사고로 사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불법 영업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특히 영업자 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강원 동해시 무신고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에서는 일가족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는데,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 무신고 영업자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농어촌 민박을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형 민박을 관리하는 ‘관광진흥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처벌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민박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박 정보를 공개해 숙박업소 이용자가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민정 기자

지하주차장 주행하던 차량서 불...소화기로 진화

2일 오전 8시30분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행 중이던 스포티지 차량에 불이 났다. 불은 운전자와 아파트 관계자가 소화기 2대를 사용해 10분 만에 진화했다. 불로 차량 운전석과 대시보드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8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계기판 앞으로 연기가 피어올라 정차 후 문을 여는 순간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택시 승객 휴대폰 사고 판 20대 2명 징역형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모아 판매하는 택시기사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판 20대 남성(일명 흔들이) 2명이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6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한 노상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법 매입한 휴대폰 251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월말부터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사들여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휴대폰 250~300대를 매입했다. B씨는 2019년 1월6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한 도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휴대폰이 불법 매입한 장물임을 알고도 120만원을 지급하고 251대를 구입해 취득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13년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재판 중이 이 사건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정상을 잠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운항한 40대 검거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 수영만 오프경기장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250마력)로 출항, 약 40여분 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순찰중이던 해경은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보고 A씨를 붙잡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고를 해야만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뺑소니 사고로 집유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았던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판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였다. A씨는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데 이어 2018년에는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